

II. 핵심이슈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조사국 황설웅 안지민 유성현

목 차

검토 배경.....	62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특징.....	64
경제안보 패러다임하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71
국내외 투자 흐름 변화의 거시적 영향.....	81
정책적 시사점	83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KEY TAKEAWAYS

1. 우리 경제에서 ①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 약화, ② 해외직접투자_{FDI} 확대, ③ 군비지출_{국방비}, 방산투자 증가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2017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공급망 병목, 러우전쟁 등을 거치며 경제적 수단_{수출통제·보조금·산업정책}이 안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안보 논리가 기업·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안보 패러다임은 ①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② 핵심기술 및 전략자산 경쟁, ③ 보호무역주의 확산, ④ 복원력·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 원자재와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이 미·중에 편중된 가운데 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출입 통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생산보조금·현지조달 요건 등 비관세 산업지원 정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프렌드쇼어링·니어쇼어링을 통한 생산거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이러한 구조적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결정 방식을 효율성 위주에서 안보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확장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설비투자와 경기 간 동조성도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 증감률을 SVAR 모형*으로 요인분해한 결과, 안보·글로벌 요인_{GPR·TPU·GSCPI·미국 장기금리}의 기여 비중이 2001~2019년 평균 29.6%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3.9%로 약 14.3%p 확대되었으며, 특히 무역정책 불확실성_{+8.7%p}과 지정학적 리스크_{+4.0%p}의 영향이 확대되었다. 또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이 부상하기 이전에는 설비투자가 시장 변동성·경제정책 불확실성·기업 신용스프레드 등 전통적 거시·금융 지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가동률·금리·수출 등 경기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패러다임 부상 이후 이러한 관계는 약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의 음(-)의 상관관계가 새롭게 부각되는 등 경제안보 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4.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 제조업의 설비투자 변동요인을 SVAR* 모형으로 분해한 결과, 두 산업 모두에서 투자 결정 구조가 '시장·경기' 중심에서 '안보·글로벌' 요인도 포괄하는 다층적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과거 메모리 업황 사이클과 가동률 등 전통적 실물 변수가 투자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이 추세적으로 확대되면서 안보·글로벌 요인이 투자 변동에 기여하는 비중이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8.7%로 약 15.7%p 상승하여 시장·경기 요인_{51.3%}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난다.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이 2015~2019년 평균 25.9%에서 2020~2024년 평균 50.9%로 약 24.9%p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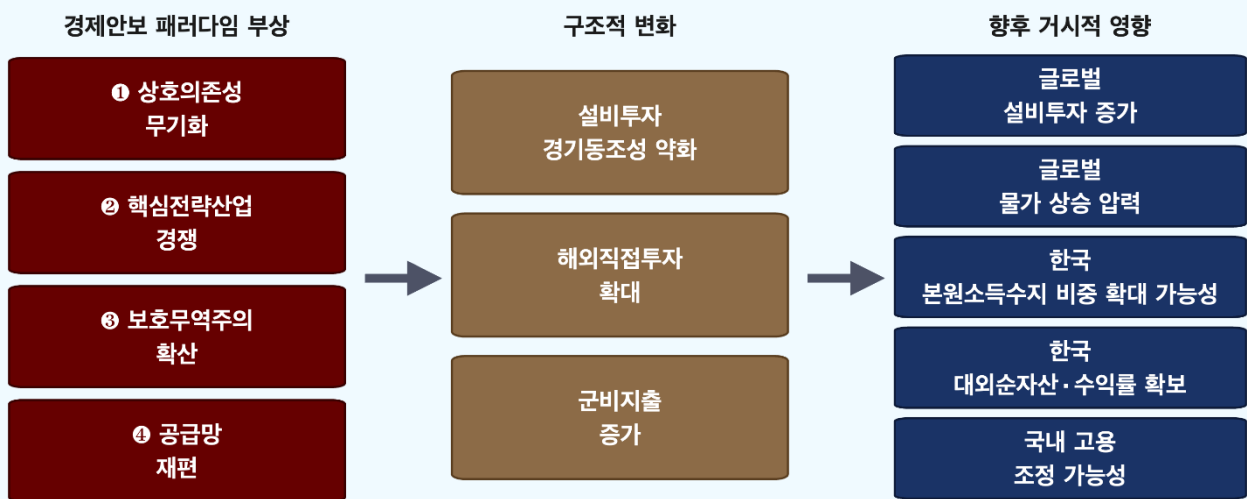
* 분기 시계열(GPR·TPU·GSCPI, 미국 10년물 금리, 수출, 환율, 제조업 가동률, 회사채 금리, 설비투자)을 활용해 콜레스키 분해 기반 recursive 식별 SVAR을 추정하였으며, 충격반응함수의 신뢰구간은 부트스트랩으로 산출

5. 한편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_{FDI} 또한 경제안보 요인들이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VAR 충격반응 분석 결과, 지정학적 리스크 충격 시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자본의 대외 전환' 패턴이 관찰되었으며, 글로벌 공급망 압력 충격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가 동반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6.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에 따른 국내 제조기반 공동화와 제조 협력 생태계 약화, 고용 유발효과 둔화 등 부담 요인을 동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 수혜, 비관세 장벽 우회, 글로벌 기술표준 경쟁 참여 등을 위한 '이너서클_{Inner Circle}' 진입과 대외 순자산 축적·글로벌 수익률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도약하고 첨단 기술 생태계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7.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진영 간 중복투자와 군비지출 증가가 설비투자 수요를 확대시키는 한편, '예방적 재고 확보_{Just-in-Case}' 방식 전환과 우회수출에 따른 공급망 다층화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구조가 상품수지 중심에서 본원소득수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원소득의 원천이 결국 우리 기업의 제조 경쟁력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환이 상품수지의 근간을 이루는 국내 제조·수출 기반의 약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GVC 상단의 협상력 활용 및 기술동맹 네트워크 강화, ② 규제개혁·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핵심 제조공정 및 R&D의 국내 잔류 유인 제고, ③ 고속련 인재 양성을 통한 무형자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1. 검토 배경

1. 최근 설비투자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설비투자 규모는 팬데믹 국면에서 일시적 조정을 거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주요국 교역에서도 소비재는 둔화되는 반면 자본재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2]**

2. 글로벌 설비투자의 견조한 흐름은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그림 3]**와 주요국의 산업정책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설비투자와 경기 간 동조 관계 약화로 확인된다.**[그림 4]** 글로벌 설비투자는 경기순응적 성격이 강해 당기는 물론 시차를 두고도 경기·교역과 높은 동조성¹을 보여 왔으나, 최근 선행·후행 시차에서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 즉 설비투자가 경기변동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보다 자체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변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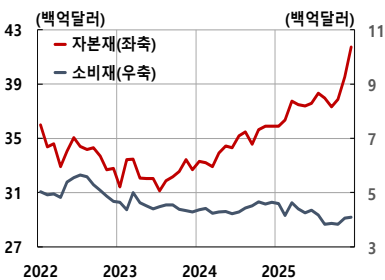
글로벌 설비투자 및 자본재 교역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의 자본지출이 이를 뒷받침

[그림 1] 글로벌¹⁾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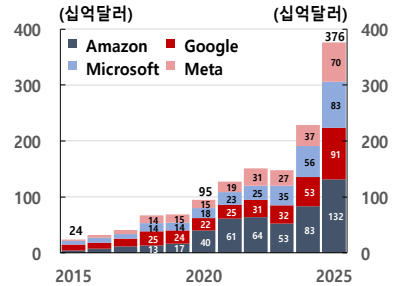
주: 1) 미국, 중국(추정), 유럽 합산
자료: BEA, Haver, OECD

[그림 2] 주요국¹⁾ 주요 자본재²⁾ 및 소비재³⁾ 교역량⁴⁾



주: 1) 미국, 중국
2) 기계류, 전기광학정밀의료기기 등
3) 의류, 신발류, 화장품, 완구류 등
4) 수출입 합계를 계절조정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 미국 빅테크 자본지출 CAP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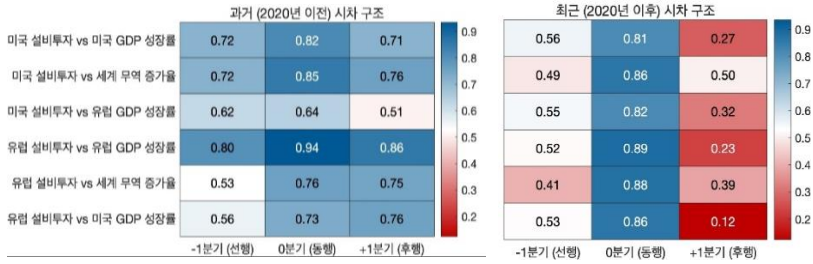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3. 우리나라 설비투자에서도 경기 동조 관계 약화가 관찰된다.**[그림 5]** 실질 GDP와 설비투자GDP 기준 간 상관계수는 과거2000~2019년 약 0.8 수준에서 2020년 이후로는 0.2 내외로 하락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경우설비투자지수 기준, 상관계수 0.3에도 동조 관계가 약화되어 이러한 현상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변화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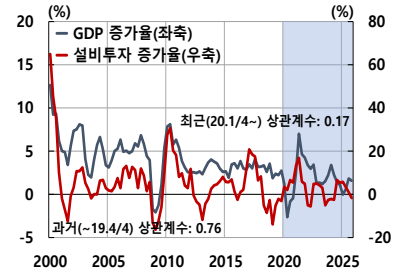
¹ 전통적 가속도 원리(Samuelson 1939)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결정 이후 실제 발주와 납품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후행적 동조성이 발생한다.

글로벌 및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 관계가 약화

[그림 4] 글로벌 설비투자의 경기 및 무역 상관관계 변화¹⁾



[그림 5] 한국 설비투자 경기 동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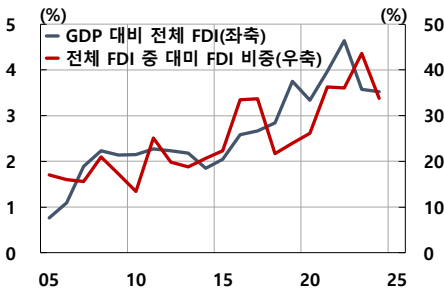
주: 1) '과거': 2001~19년, '최근': 2020~25년
 자료: OECD, 네덜란드 CPB

자료: 한국은행

4.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설비투자의 동조성 약화와 함께 해외직접투자_{FDI}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우리나라 FDI는 2020년 이후 대미 투자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국내 설비투자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이러한 흐름의 주요 배경으로는 반도체 제조업 등 글로벌 공급망 상단에 위치한 산업이 주요국 산업정책(미국의 반도체 법(CHIPS Act)·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직접 수혜 대상이 되면서 해외 투자 유인이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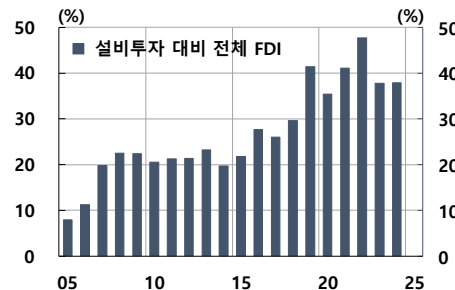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미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

[그림 6] 한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그림 7] 한국 설비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5.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군비지출_{국방비}, 방산투자 또한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림 8] 방위산업 부문에 속하는 민간기업의 매출과 설비투자가 가파르게 증가 [그림 9]하는 등 정부·민간 모두 안보 지향적 자본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글로벌 군사지출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전후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파르게 확대되었다. 최근 중동 사태 등 연이은 지정학적 갈등은 이러한 흐름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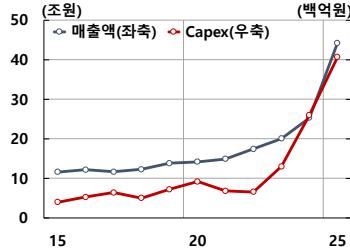
글로벌 및 우리나라 모두에서 군비지출이 구조적으로 확대

[그림 8] 한국 GDP 대비 군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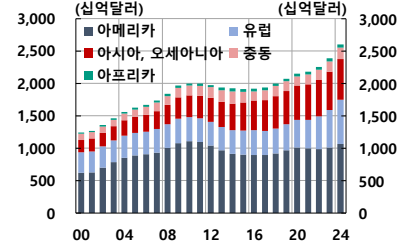
자료: SIPRI

[그림 9] 국내 상위 5개 방산기업¹⁾ 매출액 및 설비투자



주: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자료: Bloomberg

[그림 10] 지역별 군사지출 추이¹⁾ (2000~2024년)



주: 1) 2024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6. 본 보고서는 우리 경제에 나타나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 즉 ① 설비투자의 경기동조성 약화, ② 해외직접투자_{FDI} 확대, ③ 군비지출 증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동인으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을 살펴본다. 경제안보 개념은 냉전 종식 이후 오랜 기간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임을 공식 선언하면서 재부상하였다.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팬데믹발 공급망 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중동 사태 등을 거치며 동 개념은 주요국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정착되었다.² 본 보고서는 경제적 수단·수출통제·보조금·산업정책이 안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안보 논리가 기업·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경제안보' 패러다임으로 규정한다. 이하에서는 동 패러다임의 특징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거시적 영향을 논의한다.

2.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특징³

특징: ①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7.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이다. 과거 세계화 진전기에는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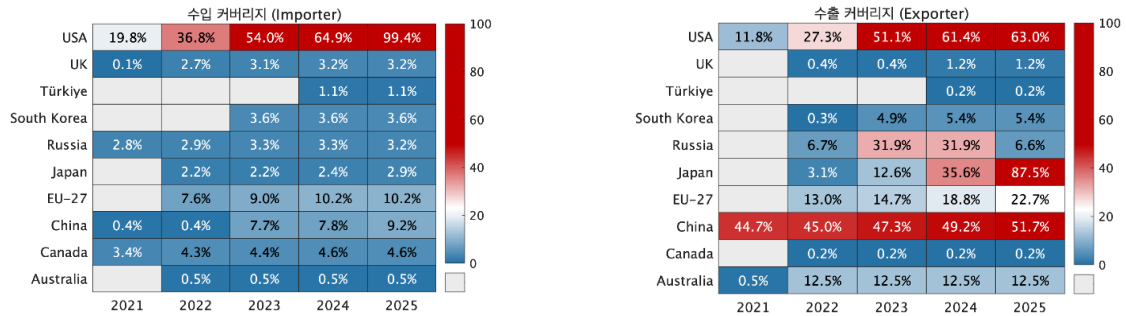
² 유럽연합(EU) 또한 「유럽 경제안보 전략(2023)」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기술 유출 방지, 경제적 강압 대응을 명시한 공식 전략을 채택하였다.

³ 김유철(2025)에 따르면 경제안보는 "핵심 품목 공급망의 교란, 핵심 첨단기술의 유출, 다른 국가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에 따른 상호의존의 무기화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 주권 독립,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정의된다.

크게 늘어났다. 미·중 양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수출입 통제를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⁷

미·중 양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수출입 통제를 경쟁적으로 확대

[그림 13] 국가안보 관련 수출입 제한 조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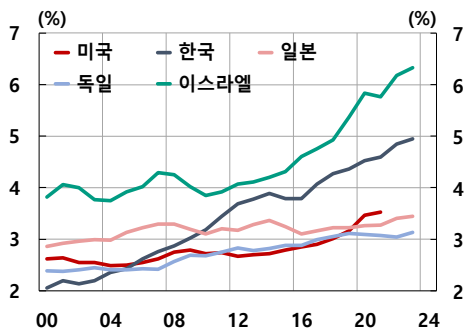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lert

특징: ② 핵심기술 및 전략자산⁸ 경쟁

10. 경제안보 패러다임 하에서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이 국가안보와 기술패권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격상됨에 따라, 과거 산업 경쟁력의 관점에서 인식되던 기술 개발이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미국·한국·일본·독일·이스라엘 등 주요 기술 선도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그림 14] 글로벌 산업정책 시행 건수 역시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그림 1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개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의 R&D 투자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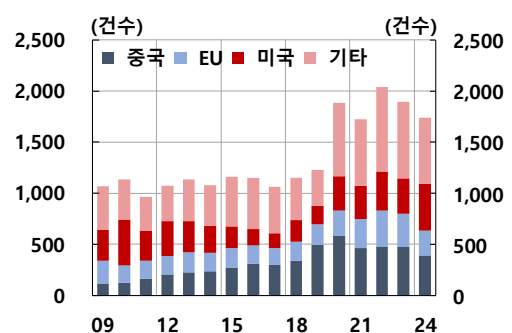
[그림 14] 주요국 GDP 대비 R&D 비중



자료: OECD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개입 확대

[그림 15] 글로벌 산업정책 시행 건수



자료: Global Trade Alert

⁷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한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강화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관세를 발동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 소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범위를 반도체·배터리 범주(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에서 디스플레이·태양광·방산 범주(인듐·안티몬·비스무트 등)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GVC 상단 공급자라는 위치를 안보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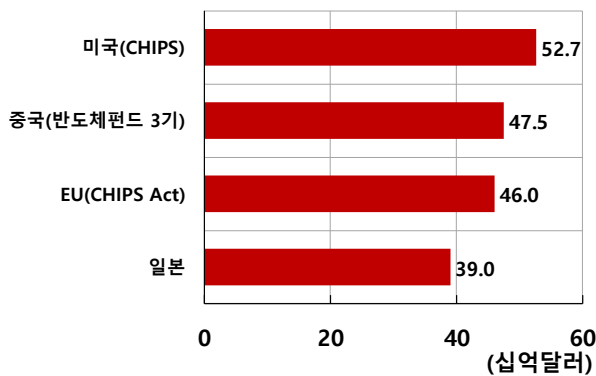
⁸ 바이든 행정명령 14017호에 따른 100일 검토 보고서는 ① 반도체 제조·패키징, ② 전기자동차·2차 전지, ③ 주요 광물·원자재, ④ 핵심 의약품·원료 등 네 개 공급망을 핵심 안보 취약 분야로 명시하고 미국 내 제조 역량 제고를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11. 핵심기술 확보 경쟁은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국의 대규모 보조금·세제 지원[그림 16]이 실물 투자 확대와 산업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CHIPS Act 527억 달러와 IRA 3,690억 달러 시행 이후 미국내 반도체 관련 건설투자가 급증[그림 17]하고 TSMC·삼성·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EU는 EU CHIPS Act 460억 달러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반도체 빅펀드 3기 475억 달러를 포함해 누적 약 13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며 반도체 자립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산업 부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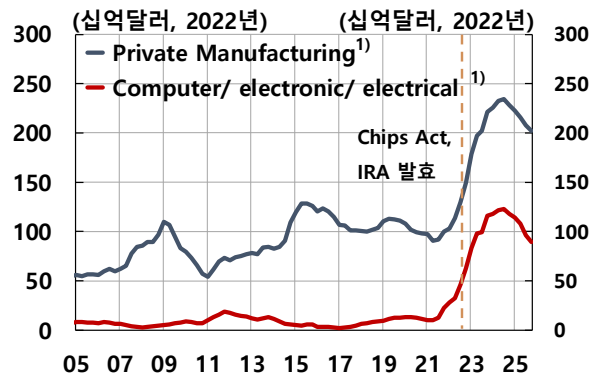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

미국 내 반도체 관련 건설투자 급증

[그림 16] 주요국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¹⁾



[그림 17] 미국 내 건설투자



주: 1) 미국 CHIPS Act는 22~26년 보조금, EU CHIPS Act는 23~30년 보조금,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 및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보조금

주: 1) PPI for Intermediate Demand Materials and Components for Construction을 이용하여 실질화

자료: 미국 상무부, 유럽집행위원회, 중국 재정부,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U.S. Census Bureau, Bureau of Labor Statistics

12.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반도체·AI를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1월 본회의 통과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AI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2025년}, GPU 확충 및 AI 고속도로 구축 추진, AI 예산 확대 등 인프라·제도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⁹ 자세한 내용은 [BOX 1] 주요국의 경제안보 핵심 산업정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징: ③ 보호무역주의 확산

13.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또 다른 단면은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보호무역이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특정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였다면 현재는 주요국들이 앞장서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누적된 수입제한조치의 대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기준 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18]** 이는 세계 총수입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으로 자유 무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세계 수입제한조치 누적 규모 확대

보호무역 수단으로 비관세 산업지원 조치 도입 증가



주: 1) 2009년 이후에 도입되어 2025년에도 유효한 수입제한조치(관세, 수입쿼터 등)의 적용을 받는 무역규모 합산, 무역구제조치는 제외
 주: 1) 수입관세, 무역구제조치, 수입쿼터, 수출보조금 등
 2) 생산보조금, 정책금융, 세금감면 등
 자료: Global Trade Alert

자료: WTO

14. 보호무역 수단으로는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직접 제한하는 전통적 수입제한조치보다 생산보조금, 정책금융, 세제지원 등 자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비관세 산업지원 정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그림 19]** 관세, 수입쿼터, 무역구제조치 등과 같은 전통적 수입제한 조치의 도입 건수는 최근 10여 년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관세 산업지원 조치는 202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¹⁰ 후자의 경우 형식상 산업육성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15. 보조금 정책은 현지조달 비율 등 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을 강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 IRA는 세액공제 조건으로 북미 최종 조립, 배터리 부품의 북미 생산 비율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CHIPS Act 역시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를 제한하는 조건을

¹⁰ 2025년 들어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인상이 재확대되면서 전통적 수입제한과 비관세 산업지원이 병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8. 국가간 교역의 축이 비용 효율성에서 지정학적 신뢰로 이동함에 따라 무역의 블록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그림 22] 2017년 이후 무역 파편화가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국가 간 교역은 확대된 반면, 거리가 먼 국가 간 교역은 감소하는 등 지정학적 거리에 따른 무역 블록화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의 첨단기술제품^{ATP} 수입 구조를 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비중이 2014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아세안·대만·EU·멕시코·한국 등 우호국 및 인접국의 비중은 확대되었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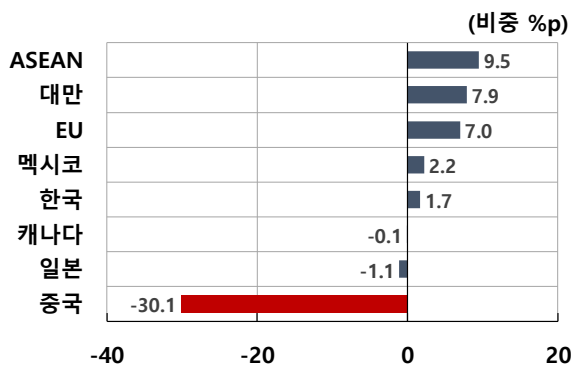
19. 직접투자^{FDI}에서도 안보 논리가 자본 배분을 좌우하는 프렌드쇼어링 등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그림 24] 글로벌 FDI는 전자기기, 자동차 등 전략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급망 안정성과 안보 요인을 우선시하는 프렌드쇼어링 등 선택적 투자가 강화되고 있으며, 동 기조가 무역뿐 아니라 자본 흐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첨단기술제품 수입구조 변화

프렌드쇼어링 기조 확대

[그림 23] 미국 첨단기술제품 수입 내 주요국 비중 변화¹⁾

[그림 24] 글로벌 FDI 중 우호국¹⁾ 및 전략산업²⁾ 비중 추이



주: 1) 2014년 대비 2024년 증감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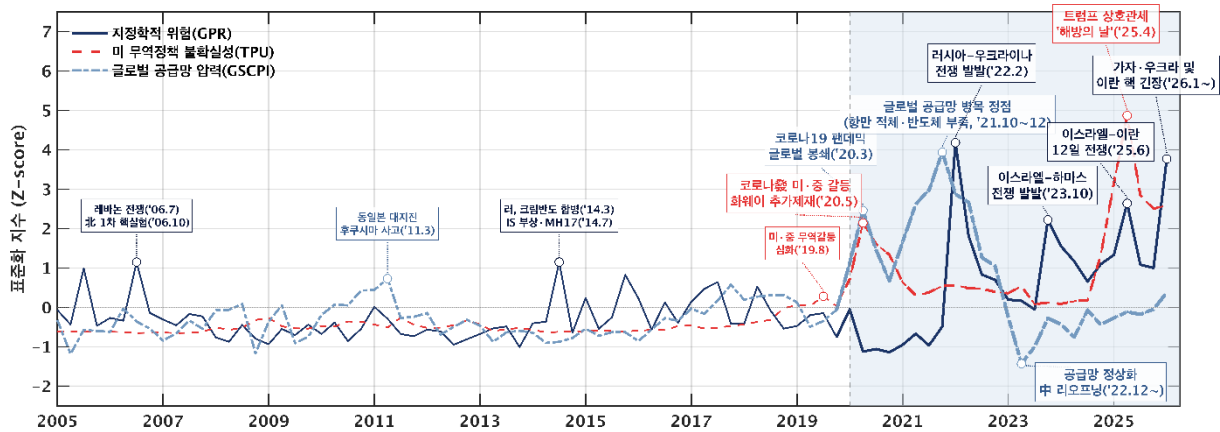
주: 1) UN 총회 투표 성향 등을 기준으로 우호국 분류(Bailey et al.(2017))
2) 전자기기, 자동차, 정보통신업 기준
자료: IMF, UNCTAD

20. 이러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은 ①지정학적 리스크^{GeoPolitical Risk Index}, ②美 무역정책 불확실성^{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③글로벌 공급망 압력^{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등 주요 지수의 움직임에서도 확인된다.^[그림 25] 세 지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상호 강화되는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GPR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사태 등 연이은 지정학적 갈등을 반영하며 추세적으로 상승하였다. TPU의 경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시행,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등으로 2020년 급등하였다가 낮아졌으며,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재차 급등하였다. GSCPI 또한 팬데믹발 물류 차질·수출통제 강화·공급망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2021~2022년 중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낮아졌다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충격의 구조적

확대는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의 투자 결정 기준이 비용 절감·효율성 위주에서 공급망 안정성·전략산업 보호·안보 확보까지 포괄하도록 변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3가지 경제안보 충격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투자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다.

지정학적 리스크,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2020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

[그림 25] 경제안보 관련 충격¹⁾



주: 1) 각 지표는 Z-score 표준화(평균 0, 표준편차 1)
 자료: Caldara and Iacoviello(2022), Baker et al.(2016), FRBNY

3. 경제안보 패러다임하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①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패러다임 전환: '효율성' 위주에서 '안보'까지 함께 고려

21.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경기·교역 간의 동조관계가 약해진 배경으로는 주요국의 산업정책 시행과 진영 간 기술 경쟁 심화로 투자 결정 기준이 효율성에서 안보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등과 같이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국의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진영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2.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 증감률을 SVAR 모형¹³⁾으로 요인분해한 결과에서 이러한 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안보·글로벌 요인GPR·TPU·GSCPI·미국 장기금리의 기여 비중은 2020년 이전2001~2019년 평균 29.6%에서 2020년 이후2020~2026Q1 평균 43.9%로 약 14.3%p 확대된 반면, 시장·경기 요인자체 충격·수출·환율·가동률·회사채 금리의 비중은 70.4%에서 56.1%로 축소되었다. 특히 美 무역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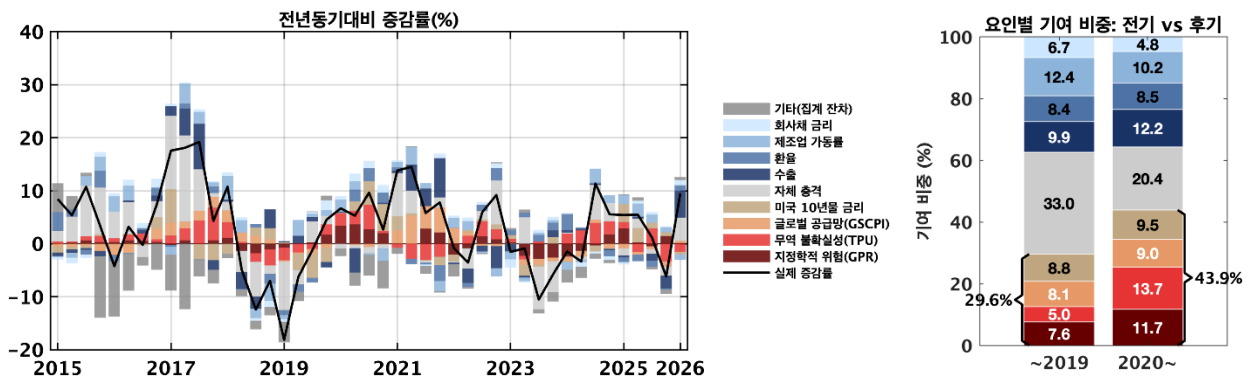
¹³⁾ 분기 시계열(GPR·TPU·GSCPI, 미국 10년물 금리, 수출, 환율, 제조업 가동률, 회사채 금리, 설비투자)을 활용해 콜레스키 분해 기반 재귀식별 SVAR을 추정하였다.

불확실성_{TPU}의 기여 비중이 5.0%에서 13.7%로 +8.7%p 확대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지정학적 리스크_{GPR}도 7.6%에서 11.7%로 +4.0%p 상승하였다.

23. 시기별로 보면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기에는 메모리 업황 자체 충격이 제조업 가동률 등 시장·경기 요인과 함께 설비투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는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한 선제적 설비 도입¹⁴과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맞물리며 안보·글로벌 요인이 모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였고,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추가적 상방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2022년** 러우전쟁 이후로는 자동차·반도체 산업 설비투자가 지정학적 충격에 직접 노출되었다. **2024년**에는 AI·HBM 수요 급증에 따른 산업 자체 충격이 회복을 견인하였으나,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상호관세 확대로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_{TPU}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설비투자 결정요인이 '시장·경기' 위주에서 '안보·글로벌' 요인까지 포괄

[그림 26] 한국 설비투자 증감률 요인분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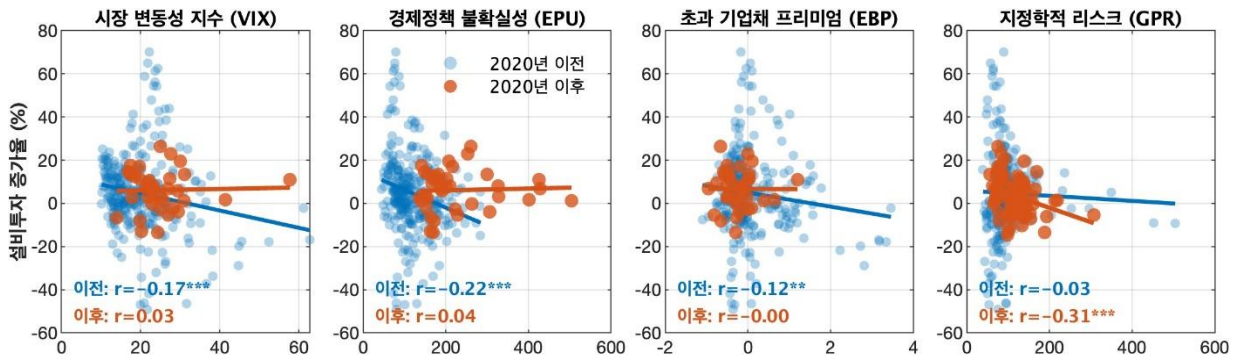
주: 1) 14개 세부 산업의 설비투자 증감률을 각각 SVAR 모형으로 요인분해한 후 산업별 가중치로 합산. 합산 결과와 실제 전체 증감률 간 차이는 집계 잔차로 처리하였으며, 기여 비중에서는 식별된 9개 요인의 상대 비중만 표시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24.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은 설비투자과 주요 거시·금융 변수 간 상관관계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그림 27]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2020년 이전에는 시장 변동성_{VIX}, 경제정책 불확실성_{EPU}, 기업 신용스프레드_{EBP} 등 전통적 거시·금융 지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최근 이러한 관계가 약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_{GPR}와의 음(-)의 상관관계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금융시장 변동성이나 실물경기 흐름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가 간 갈등 등 경제안보 관련 요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¹⁴ 관세인상·공급 차질에 대비한 선제적 확보 유인이 작용하여, 공장·기계 등 대규모 고정설비와 달리 비가역성이 낮은 운송장비 등에 대한 설비투자는 확대되었다.

설비투자가 실물경기보다 안보관련 리스크에 유의하게 반응

[그림 27] 불확실성 및 금융지표와 설비투자의 구조적 관계 변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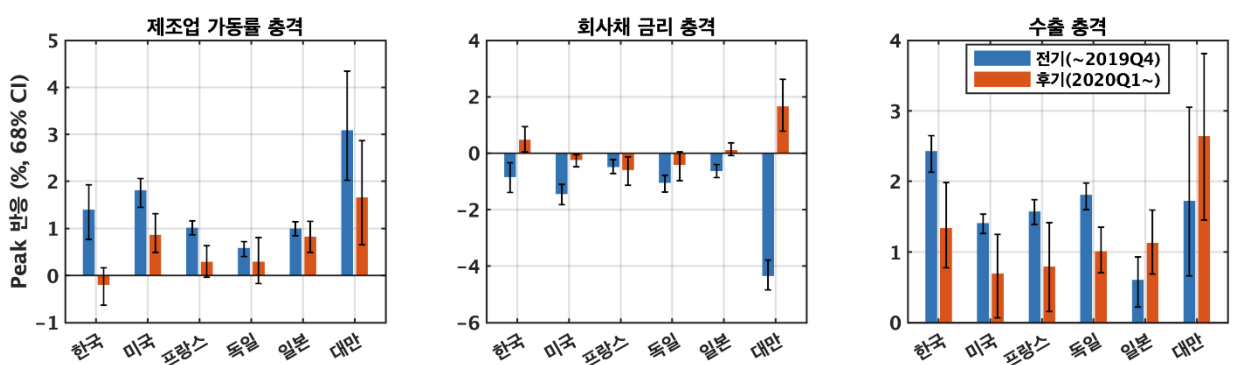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
 자료: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CBOE), Baker, Bloom and Davis(2016), Gilchrist and Zakrajšek(2012), Caldara and Iacoviello(2022), 국가데이터처

25. 우리나라와 주요국에 대한 SVAR 충격반응 분석¹⁵ 결과를 보면, 설비투자가 가동률·금리·수출 등 경기적 요인에 반응하는 경로가 2020년 이후 공통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설비투자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¹⁶ 그림 28] 한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대만 등 6개국을 보면 2020년 이전에는 가동률 상승이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기순응적 관계, 회사채 금리 상승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음(-) 반응, 수출 확대가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양(+) 연계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세 경로 모두에서 이러한 관계가 대체로 약화되거나 더 이상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¹⁶

주요국 설비투자의 가동률·금리·수출 등 경기요인에 대한 반응이 약화

[그림 28] 충격별 주요국 설비투자 최대 반응 비교: 전기 대 후기¹⁾



주: 1) 1~12분기 충격반응 중 최댓값을 막대로, 68% 신뢰구간을 에러바로 표시
 자료: 저자 추산

¹⁵ SVAR을 전기·후기 표본에 각각 추정하였으며, 충격반응함수의 신뢰구간은 부트스트랩으로 산출하였다.
¹⁶ 특히 수출 충격의 경우 한국·미국·프랑스 등에서 양(+) 연계가 사라지고 독일·일본·대만에서는 그 강도가 약화되었는데, 이는 수출 증대가 국내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전통적 경로가 약화되는 가운데 한국 등에서는 해외 생산거점 투자 확대가 그 자리를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②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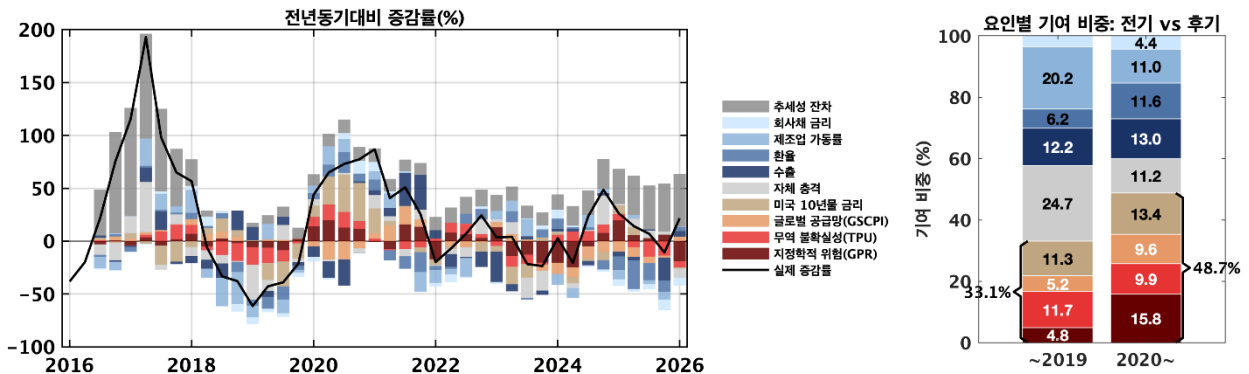
26.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 제조업의 설비투자 변동요인을 SVAR 모형으로 분해해 보면, 두 산업 모두 투자 결정이 '시장·경기' 요인 위주에서 '안보·글로벌' 요인도 포괄하는 다층적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9]

27.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 2016~2018년 기간 중에는 설비투자가 메모리 업황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경기순응적 흐름을 보였다. 2017년 호황 국면에서는 제조업 가동률과 자체 요인이 상방으로 작용하며 설비투자를 견인한 반면, 2018년 다운사이클 국면에서는 동 요인들이 주된 하방 압력으로 전환되었다. 안보·통상 요인도 일부 기여하였으나, 주된 변동 요인은 메모리 사이클을 반영하는 자체 요인과 국내 가동률 등 전통적 실물 경기였다.

28. 그러나 2019년 이후 미·중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주요국의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며 반도체 설비투자의 결정 구조는 안보·글로벌 요인까지 포함하는 다층 구조로 확장되었다. 안보·글로벌 요인(GPR·TPU·GSCPI·미국 장기금리)의 기여 비중은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48.7%로 약 15.7%p 확대되며 시장·경기 요인 비중 51.3%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¹⁷

반도체 제조업 설비투자 결정요인이 '시장·경기' 위주에서 '안보·글로벌' 요인까지 포괄

[그림 29] 반도체 제조업 설비투자 요인분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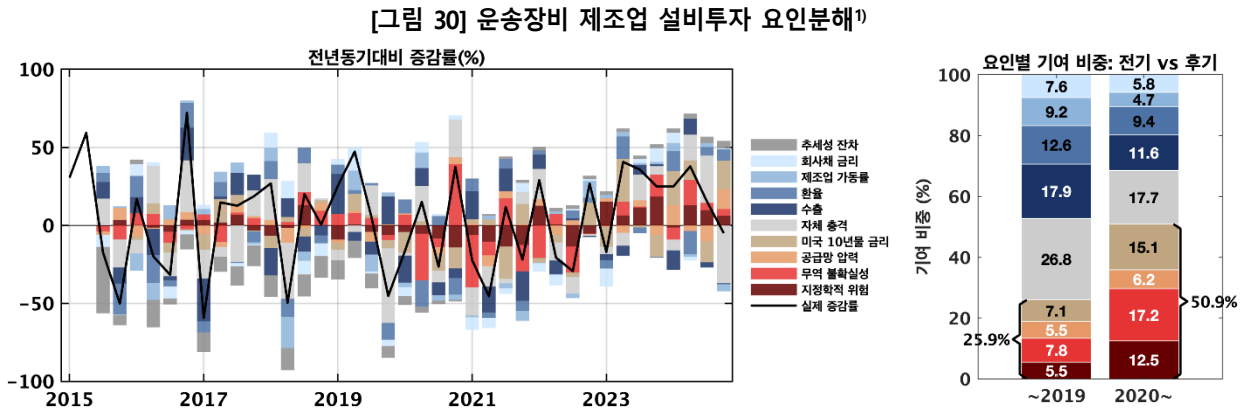


주: 1) SVAR 모형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용기계 설비투자 지수를 분석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추정

¹⁷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TPU) 확대가 설비투자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어 2020년에는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설비투자가 큰 폭 확대되었으며, 2021년에는 반도체 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압력 심화와 IT·반도체 수요 급증이 결합되며 설비투자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2년에는 러우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연준 긴축 전환 등이 복합 작용하며 투자가 위축되었고, 2023년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의 지정학적 요인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024년에는 HBM 중심 AI 수요 및 CHIPS Act 기대로 자체 요인이 설비투자를 상방 견인하였다. 2025년에는 글로벌 통상 마찰과 대중 장비 수출통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위축되었고 2026년 1분기에는 중동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설비투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9. 자동차_{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에도, 투자 결정이 '시장·경기' 위주에서 안보·글로벌 요인까지 포함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림 30** 요인분해 결과 안보·글로벌 요인_{GPR·TPU·GSCPI·미국 장기금리}의 기여 비중은 2015~2019년 평균 25.9%에서 2020~2024년 평균 50.9%로 24.9%p 확대된 반면, 가동률·수출·환율 등 시장·경기 요인의 비중은 동 기간 74.1%에서 49.1%로 축소되었다.¹⁸

운송장비 제조업 설비투자 결정요인이 '시장·경기' 위주에서 '안보·글로벌' 요인까지 포괄



주: 1) 국민계정상 운송장비 제조업의 연간 설비투자 규모를 국내 완성차 대표기업의 '유형자산 취득' 자료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환산하였으며, SVAR 모델을 추정
 자료: FnGuide, 한국은행, 저자 추정

③ 해외직접투자 확대: 경제안보 요인에 따른 전략적 자본 재배치

30. 최근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도 경제안보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해외 진출이 주로 인건비 절감이나 신흥국 시장 개척을 위한 '효율성 추구형'이었다면, 최근의 해외직접투자는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압박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지향적' 성격이 짙다.¹⁹ 이는 단순한 시장 추구를 넘어 보조금 수혜, 비관세 장벽 우회, 첨단 기술 생태계 접근 등 복합적 목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¹⁸ 시기별로 보면, 2015~2018년 기간 중 설비투자는 대체로 신차 출시 주기와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 추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기순응적 흐름을 나타내었다. 특히 2016년 중에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반영하는 자체 충격과 수출 경기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등 자본지출이 전통적 실물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무역정책 불확실성(TPU)이 자동차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결합되며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하방 압력도 커졌다. 이후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겹치며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안보·글로벌 요인이 자동차 설비투자를 크게 위축시켰다. 2022년에는 러우전쟁 발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사적 고점에 도달하게 되고 동년 3분기에는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가세하여 함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누적된 안보·통상 충격이 설비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2023년 이후에는 미국 IRA·CHIPS Act 등 주요 산업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간 누적되었던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안보·통상 충격의 영향이 상방으로 전환되었다.

¹⁹ 미국의 IRA·반도체법(CHIPS Act) 시행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는 구조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미국은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최대 단일 투자처(약 253억 달러)로 부상하였다.

31. 특히 미국 산업정책의 변화는 한국 주력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의사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1]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CHIPS Act 시행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생산·후공정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고, 주요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IRA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수혜를 늘리기 위해 합작·단독 공장 건설을 빠르게 진행하였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시행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되자 일부 배터리 합작 투자가 해산·재편 수순을 밟게 되는 등 미국 산업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기업의 투자 시점·규모는 미국 산업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

[표 1] 미국 산업정책 이후 한국 주요 기업의 투자 결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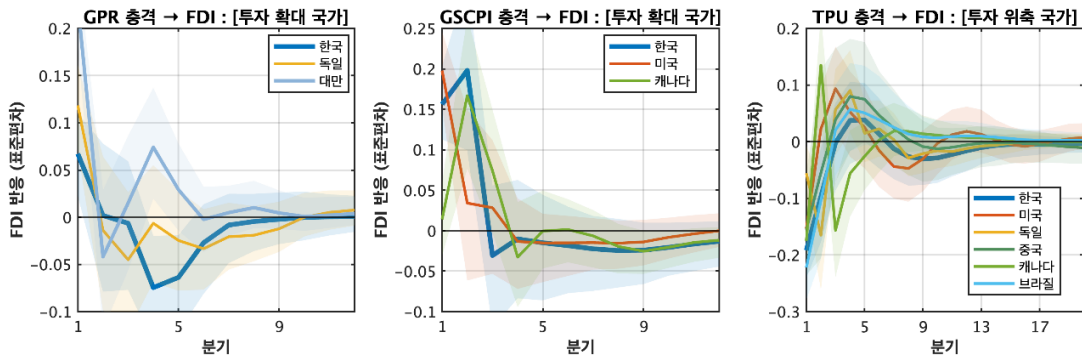
기업명	결정 시기	투자 규모 및 방향	투자 결정 동인
삼성전자	2021년 발표 → 2024년 재조정	170억 달러 → 370억 달러 (보조금 47.5억 달러)	CHIPS Act 도입 이후 투자 규모 확대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SK하이닉스	2024년 발표	38.7억 달러 (보조금 4.58억, 대출 5억 달러)	CHIPS Act 도입 이후 투자 발표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
삼성SDI	2022년 발표	25억 달러 (합작 공장 착공가동 조기 시행)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 착공가동 조기 시행
LG에너지솔루션	2022년 발표 → 2024년 재조정	1.7조원 → 7.2조원	IRA 시행 후 북미 수요 확대에 대응한 투자 확대(애리조나 단독 공장)
SK온	2025년 발표	합작법인(블루오벌SK) 해산 합의	OBBBA 시행에 따른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자료: 각사 발표

32. SVAR 모형을 활용한 충격반응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_{FDI}에 자본의 대외 전환, 공급망 상단 입지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어, 경제안보 패러다임에 따른 전략적 투자의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31] 지정학적 리스크^{GPR} 충격 발생 시 우리나라 FDI는 독일이나 대만과 같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국내 설비투자가 위축^{<참고>} 경제안보 충격의 설비투자 파급효과 참조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자본의 대외 전환' 패턴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GSCPI} 충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FDI와 국내 설비투자^{<참고>} 경제안보 충격의 설비투자 파급효과 참조가 동반 확대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밸류체인 상단에 위치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TPU} 충격에 대해서는 여타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FDI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는 관세 인상·수출통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비가역적 비용을 수반하는 해외 생산거점 투자 결정 자체가 유보·축소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글로벌 공급망 압력에는 증가, 무역불확실성 충격에는 감소 반응

[그림 31] 한국 해외직접투자: 3대 경제안보 충격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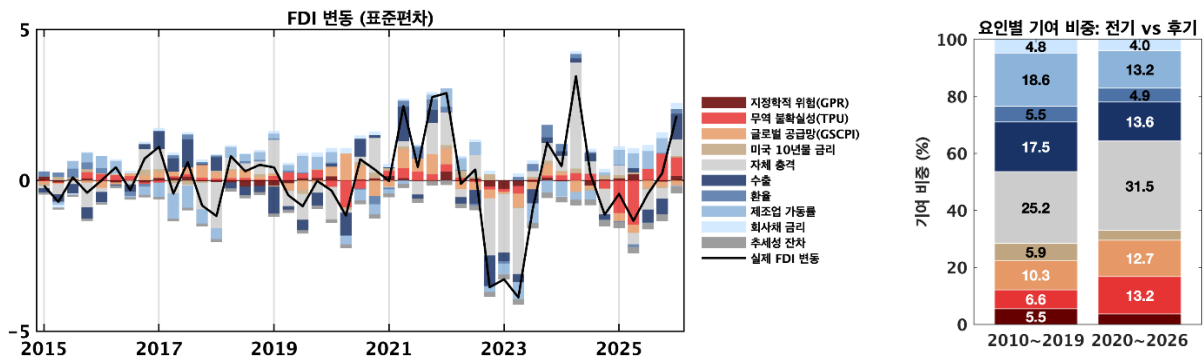


주: 1) SVAR 모형의 충격반응 추정 결과이며, 음영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적용한 68% 신뢰구간
 자료: 저자 추정

33. 해외직접투자 변동의 요인분해 결과에서도 경제안보 요인들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그림 32] 2020년 이후 자체 충격^{31.5%}과 글로벌 공급망 압력^{12.7%}·美 무역정책 불확실성^{13.2%}이 주된 FDI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010~2019년 평균 28.4%에서 2020~2026년 평균 32.9%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한국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압력과 통상 리스크 요인의 비중이 확대

[그림 32] 한국 해외직접투자 요인분해¹⁾²⁾³⁾



주: 1) 국제수지 기준 해외직접투자(FDI, 백만달러)는 분기별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전년동기차분 시계열을 표준화(평균 0, 표준편차 1)한 후 9변수 SVAR 모형으로 요인분해
 2) 회색 막대 "추세성 잔차"는 SVAR 모형의 결정론적 추세 및 초기조건 효과에서 비롯되는 비식별 변동분
 3) y축 단위는 표준편차
 자료: 한국은행,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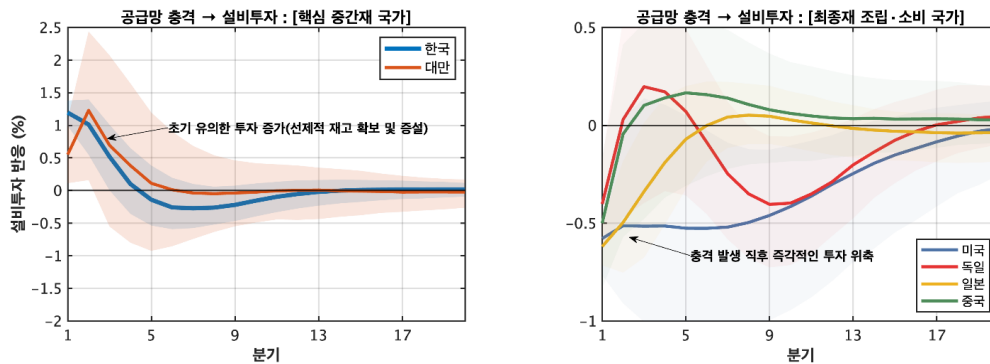
²⁰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5~2019년 기간 중에는 수출·가동률 등 거시·산업 요인이 변동을 주도하는 가운데 안보·통상 요인의 기여는 제한적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압력(GSCPI)이 FDI의 상방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2021년에는 공급망 압력·수출 호조·자체 요인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2년 4분기와 2023년 중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함께 산업 자체 요인이 하방 압력으로 크게 작용하였으며, 2025년 들어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TPU)이 FDI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참고> 경제안보 충격의 설비투자 파급 효과

① [글로벌 공급망 압력] 글로벌 밸류체인 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 발생시 설비투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특징적 반응을 보인다. 이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중간재를 공급하는 GVC 상단^{Upstream}에 위치한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급망 교란 시 최종재 생산 기업들의 선제적 주문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능력을 확충시키는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²¹ 반면,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최종재 생산 비중이 높은 GVC 하단^{Downstream} 국가에서는 공급망 충격 발생 직후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다.²² 이는 핵심 중간재 공급 차질이 생산 공정의 병목으로 이어지면서 기존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보류하거나 축소하는 데 기인한다.²³

공급망 충격은 핵심중간재 상단 국가의 설비투자에는 증가요인이나 최종재 조립 국가에는 하방 요인

[그림 i] 글로벌 공급망 충격 발생에 따른 각국 설비투자 반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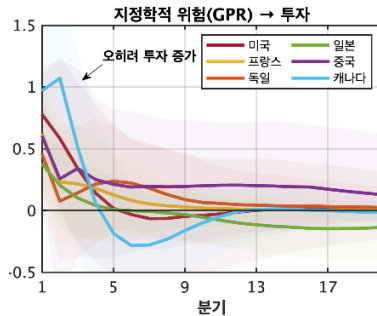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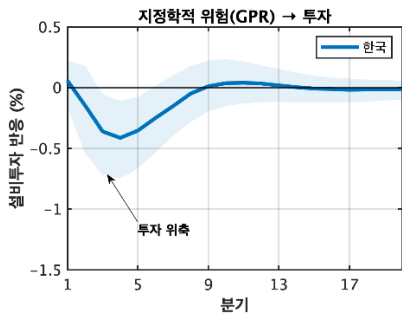
주: 1) SVAR 모형의 충격반응 추정 결과이며, 음영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적용한 68% 신뢰구간
자료: 저자 추정

②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 확대 시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한국이 주요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높은 지정학적 노출도를 가진 특성으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 확대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유보하는 경향이 강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²⁴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경제권에서는 동일한 지정학적 충격이 설비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지정학적 충격에 대응하여 반도체,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²⁵ 이는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는 정책적 계기로 작용하며, 자국 중심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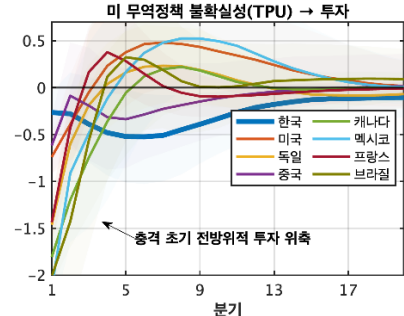
③ [무역정책 불확실성] 미국발 무역정책 불확실성(TPU) 충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미국·독일·중국·멕시코 등 분석 대상국 대부분에서 충격 발생 초기 설비투자가 유의하게 위축되는 공통적 패턴이 관찰되었다.²⁷ 이는 관세 인상, 수출 통제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비가역적 비용을 수반하는 고정투자 결정이 유보·축소되는 실물옵션^{real options} 효과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우리나라 설비투자를 위축

[그림 ii]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른 각국 설비투자 반응¹⁾



[그림 iii]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 시 각국 설비투자 반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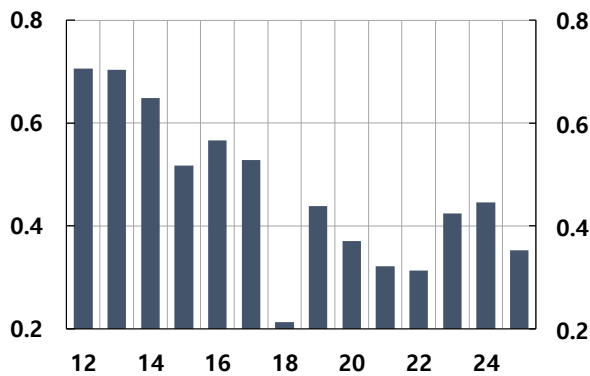


주: 1) SVAR 모형의 충격반응 추정 결과이며, 음영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적용한 68% 신뢰구간
자료: 저자 추정

34. 경제안보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린 해외직접투자의 구조적 확대는 국내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이 창출한 수익이 국내 실물 설비로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 생산거점 구축에 활용됨에 따라, 전통적인 '기업 수익-투자-고용·소득 창출'의 선순환 연결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출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민감도는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33] 투자가 유발하는 국내 부가가치도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다만 이는 자본의 해외 이전이 갖는 구조적 속성에 따른 불가피한 전환 비용의 성격이 강하여, 해외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가 확대될수록 그 영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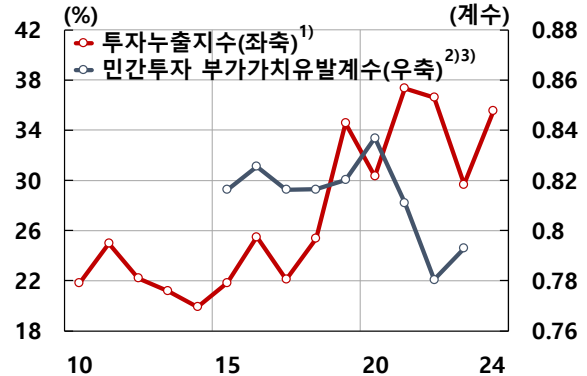
- 21 글로벌 공급망 마비로 반도체 품귀현상이 발생한 2021년 전후로 대만의 TSMC는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평택과 용인 등에 수십조원의 공장증설을 단행하였다.
- 22 우리나라, 대만과 같은 글로벌 밸류체인 상단 국가와 여타 하단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공급망 병목이 상단 국가의 과열 가능성과 채찍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 BIS(2021)의 분석과도 일관성을 보인다.
- 23 같은 시기에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했던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의 포드, 일본의 토요타는 자동차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섹터의 신규 설비투자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된 시기에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 차질과 투자 둔화가 동시에 관찰된 바 있다.
- 24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압력도 투자 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2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첨단 제조 시설의 자국 내 유치를 이끌어냈다.
- 26 지정학적 분절화가 글로벌 자본을 대규모 내수시장 및 동맹국 내부로 재배치한다는 IMF(2023b)의 분석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투자 효과가 국가별 안보 노출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Caldara and Iacoviello(2022)의 연구와 일치한다.
- 27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뿐 아니라,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투자 위축이 나타나는 등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33] 설비투자의 수출민감도¹⁾



주: 1) 8년 이동 구간에 대해 수출증가율과 설비투자율 간의 1차 선형회귀 추정 계수를 사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4] 투자 누출



주: 1) 해외직접투자액/(해외직접투자액+국내 설비투자액)
 2) 민간투자 1원당 직·간접 유발 부가가치액
 3) 15~19년은 2015년 실측표, 20~23년은 2020년 실측표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5. 그러나 현재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단순히 자본의 유출로만 보기보다는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인 '이너서클 Inner Circle'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이동의 성격도 있음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선진국 현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 IRA·CHIPS Act 등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확보하는 동시에, 높아지는 비관세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우회하고 있다. 나아가 첨단 산업의 핵심지에 직접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선도 연구기관과의 물리적·기술적 격차를 좁히고, 차세대 기술 표준 경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다.

36.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대외순자산 축적을 통해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그림 35] 대외순자산이 GDP 대비 높은 수준으로 축적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를 국가적 부로 평가하게 되어 신용등급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정부의 국채 발행이나 기업의 해외 자본 조달 시 지불하는 가산금리를 낮추며 국가채무 관리와 자본 조달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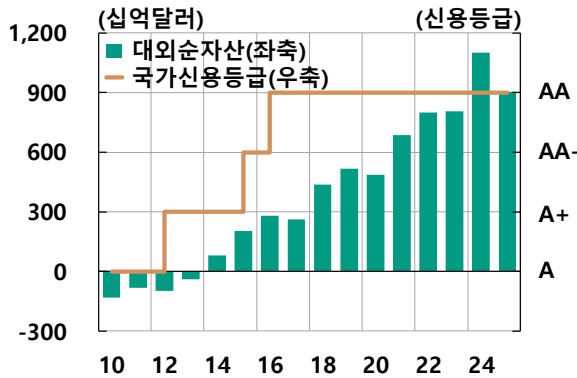
37. 나아가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국면에서[그림 36] **거시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 둔화와 금리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²⁸에서, 수익성이 낮아진 국내 실물경제에만 자본을 묶어두는 것은 우리 경제 전반의 자본 한계생산성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잉여 자본을 해외의 고성장 지역이나 전략적 첨단산업 기지로 이전하여 높은 글로벌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원배분 전략이 될 수

²⁸ 중첩세대(OLG) 모형을 통해 분석한 향후 한국의 장기 실질이자율 경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구조적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외투자 수익의 본국 환류를 통해 국내 소비와 소득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다.

대외순자산 축적은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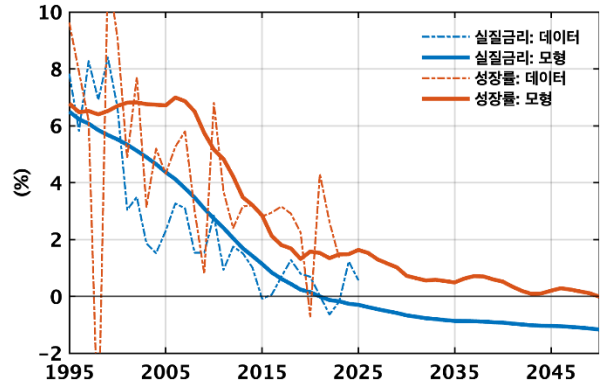
[그림 35] 한국 대외순자산과 국가신용등급



자료: 한국은행, S&P Global Ratings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및 저금리

[그림 36]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저금리¹⁾



주: 1)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효과를 반영한 실질 이자율 및 성장률 경로를 추산

자료: 저자 시산

4. 국내외 투자 흐름 변화의 거시적 영향

38.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 글로벌 설비투자는 전략자산 경쟁에 따른 투자 확대, 안보 패러다임 강화에 따른 군비증강 등으로 향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 간 분절화가 심화되면서 각 진영 내에서 동일한 전략산업의 생산기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는 중복투자가 확대되고 있다.²⁹ 국가별로도 전략자산과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며 R&D 시설과 첨단 제조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안보 패러다임 강화에 따른 군비지출 확대도 방위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9. [글로벌 물가 압력 증대] 공급망 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중심의 투자 및 생산운영 방식은 글로벌 중복투자 확대와 맞물려 공급 측면의 구조적인 글로벌 물가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그림 37] 안보를 위해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위기에 대비해 안전 재고를 쌓아두는 '예방적 재고 운영_{just-in-case}' 방식은 '즉시 생산_{just-in-time}' 방식³⁰에 비해 생산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여기에 더해 미·중 갈등 이후 제3국 우회수출 확대로 글로벌 밸류체인 단계가 길어짐에 따라,

²⁹ 미국 동맹국 블록이 자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 역시 자립적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생산능력이 이중·삼중으로 확충되고 있다.

³⁰ 과거 기업들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가장 싼 곳에 공장을 짓고 '저스트 인 타임'으로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전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공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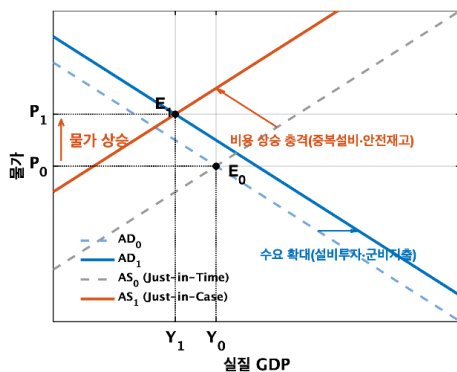
단계별 비용 누적이 생산기지 이전 비용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비용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³¹

40. [우리나라 본원소득 확대] 경상수지 구조가 상품수지 중심에서 본원소득수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³²할 가능성이 있다. ³² 상품수지는 글로벌 경기 및 통상마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누적된 해외자산 잔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본원소득³³은 단기 경기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상수지 변동성을 완화하는 안정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³³ 이러한 구조 전환은 특히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국내 생산·수출 기반의 추세적 약화가 우려되는 국면에서 GNI를 보장하는 안정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자회사 이익의 본국 환류 비중이 낮아질 경우 이러한 효과가 약화될 소지가 있으며, 본원소득의 원천이 결국 우리 기업의 제조 경쟁력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 변화가 상품수지의 근간을 이루는 국내 제조·수출 기반의 약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 및 물가 압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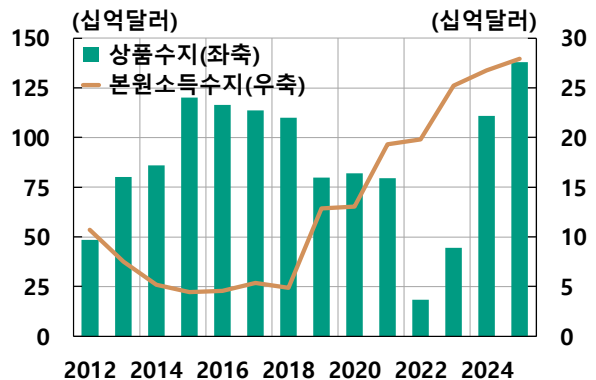
본원소득수지는 지속적 증가세

[그림 37]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료: 한국은행

[그림 38] 상품수지 변동성과 본원소득수지의 구조적 증가



자료: 한국은행

41. [우리나라 제조생태계 및 고용 조정]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제조 생태계와 노동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의 양산 라인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국내 제조 생태계를 떠받쳐 온 중소 협력업체들의 일감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 잔류한 생산기지들은 고비용

³¹ Qiu, Shin and Zhang(2023)은 기업 수준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해 미·중 공급망 사이에 아시아 제3국 기업이 개입(interposition)하면서 GVC 단계가 구조적으로 연장되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단계 연장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Kim and Shin(2023)은 'time-to-build' 모형을 통해 단계별 재고·외상매출 누적으로 필요 운전자본이 GVC 길이의 제공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으며, Diakantoni et al.(2017)은 무역비용이 중간재의 여러 가공 노드를 통과하며 누적·증폭되는 '캐스캐이드 효과'를 실증한 바 있다.

³²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외 순채권국으로 전환된 2014년 이후로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³³ 국제수지 발전단계론(Balance of Payments Stages Hypothesis)에 따르면 대외순자산이 충분히 누적된 성숙채권국(mature creditor) 단계에서는 무역수지가 균형 또는 적자로 전환되더라도 본원소득수지 흑자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구조가 형성되며,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무역수지 적자를 충분히 상쇄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mature creditor 단계의 전형적 경로를 보이고 있다.

구조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을 활용한 생산공정 자동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화·무형자산 중심의 투자 확대는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물리적 공장 건설에 비해 고용 유발효과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도약하고 첨단 기술 생태계의 핵심에 직접 접근하는 전략적 이동은, 단기적으로 국내 투자·고용 측면의 전환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5. 정책적 시사점

① 경제안보를 투자 촉진의 레버리지로 활용

42.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로, 우리나라는 GVC 상단 산업의 협상력을 활용하여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배터리·소재 산업이 주요국의 전략적 파트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주요국 산업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국 기업의 투자와 통상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적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일본·EU 등과의 반도체·배터리·양자컴퓨팅 분야 공동 R&D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우방국들과의 협의 채널을 통해 첨단기술·핵심광물 공급망 정보를 긴밀히 공유함으로써 '기술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② 국내 투자 환경의 근본적 혁신: '잔류 투자'의 매력도 제고

43.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가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제·보조금 지원에서 나아가 규제 샌드박스 확대, 첨단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의 지원 및 제도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잔류 유인을 강화하여야 겠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생산거점 해외 이전 과정에서 핵심 제조 역량이 약화되며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사례를 감안할 때³⁴, 핵심 설비·공정의 단계적 유출은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고속권 인력 이탈, 기술 노하우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주요국 수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되, 핵심 제조공정의 국내 기반 유지를 정책 지원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2026년} 클러스터 지정 제도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협력 생태계의 국내 집적을 강화해야 한다.

³⁴ BOK 이슈노트 제2025-14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을 참고하기 바란다.

③ 제조업 경쟁력 기반 위의 무형자산 역량 강화

44. 한국의 반도체·배터리·소재 분야 경쟁력은 수십 년간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공정 노하우와 R&D 역량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무형자산 투자는 제조업을 대체하기보다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핵심 공정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 고도화, 공정 혁신과 연계된 R&D 투자 확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심화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될수록 고속련 인재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는 만큼, 반도체·AI·첨단소재 분야 석·박사급 인력 양성 확대, 글로벌 인재 유치,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참고문헌>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법률 제19658 호 (2023).
- 김유철. (2025). 경제안보의 구조화와 국가-기업 관계의 변동. 국제정치연구, 28(3), 303-33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5).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5-032.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1.29.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 (2024).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4.12.26. 국회 본회의 통과).
- 장태윤, 김남주, 손윤석. (2025).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BOK 이슈노트, 제2025-14 호 한국은행.
- 한국무역협회. (2025). 글로벌 첨단기술제품(ATP) 공급망 구조 변화 및 시사점. Trade Focus, 2025년 13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Bailey, M. A., Strezhnev, A., & Voeten, E. (2017). Estimating Dynamic State Preferences from United Nations Voting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1(2), 430-456.
- Baker, S. R., Bloom, N., & Davis, S. J. (2016).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4), 1593-1636.
- Caldara, D., & Iacoviello, M. (2022). Measuring Geopolitical Risk. *American Economic Review*, 112(4), 1194-1225.
- Carney, M. (2026). Davos 2026: Special Address by Mark Carney, Prime Minister of Canada (Speech).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26(Davos), January 20, 2026. <https://www.weforum.org/stories/2026/01/davos-2026-special-address-by-mark-carney-prime-minister-of-canada/>
- Centorrino, S., Diakantoni, A., Keck, A., Ruta, M., Sztajerowska, M., & Wei, Y. (2025). Measuring Global Trade Policy Activity.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25-07. World Trade Organization.
- Corrado, C., Hulten, C., & Sichel, D. (2009). Intangible Capital and U.S. Economic Growth.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5(3), 661-685.
- Desai, M. A., Foley, C. F., & Hines, J. R., Jr. (2009). Domestic Effects of the Foreign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 181-203.
- Diakantoni, A., Escaith, H., Roberts, M., & Verbeet, T. (2017). Accumulating Trade Costs and Competitiveness in Global Value Chains.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17-02. World Trade Organization.
- European Commission and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2023).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and the Council on "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JOIN(2023) 20 final, Brussels, 20 June 2023.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4). Regulation (EU) 2024/1252 of 11 April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Critical Raw Materials Ac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 Farrell, H., & Newman, A. L. (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1), 42-79.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GSCPI).
<https://www.newyorkfed.org/research/policy/gscpi>
- Gilchrist, S., & Zakrajšek, E. (2012). Credit Spreads and Business Cycle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4), 1692–1720.
- Global Trade Alert (2025). G20 Trade Policy Factbook 2025. Global Trade Alert.
<https://globaltradealert.org/reports/G20-Trade-Policy-Factbook-2025>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25).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2). World Economic Outlook: 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Chapter 4: Global Trade and Value Chains During the Pandemic).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3a).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Staff Discussion Note SDN/2023/001.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3b). World Economic Outlook: A Rocky Recovery (Chapter 4: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 Kim, S. J., & Shin, H. S. (2023). Theory of supply chains: a working capital approach. BIS Working Papers No. 1070.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Japan. (2022).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Overview.
- OECD (2018). Mapping of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DOI: 10.1787/098e4f0e-en.
- Qiu, H., Shin, H. S., & Zhang, L. S. Y. (2023). Mapping the realignment of global value chains. BIS Bulletin No. 78.
- Rees, D., & Rungcharoenkitkul, P. (2021). Bottlenecks: Causes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BIS Bulletin No. 48.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Samuelson, P. A. (1939). Interactions between the Multiplier Analysis and the Principle of Acceler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1(2), 75–78.
- Sullivan, J. (2023, April 27).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The White House.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2024). World Investment Report 2024: Investment Facilitation and Digital Government.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2). CHIPS and Science Act: Summary of Provision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2). Inflation Reduction Act: Clean Energy Provisions.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23).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23: Resilient and Sustainable GVCs in Turbulent Times.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25).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Annual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BOX 1 주요국의 경제안보 핵심 산업정책

-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함께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

①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022)

- 총 527억 달러 규모의 직접 지원(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R&D·인력양성 110억 등)과 25%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며,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보조금 수혜 기업의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5% 이상 확대를 금지. 동 법에 힘입어 TSMC·삼성·인텔 등 글로벌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미국 내 반도체 관련 건설지출이 급증

②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

- 약 3,69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제조업 지원책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배터리 핵심광물의 미국·FTA국 조달 비율 및 부품의 북미 생산 비율 요건과 연계. '해외우려기관(FEOC)' 조항으로 중국 등 우려국 부품·광물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급망 탈중국화를 명시하였고,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직접 견인

③ EU: 유럽 반도체법(EU CHIPS Act, 2023) 및 EU: 핵심원자재법(CRMA, 2024)

- EU CHIPS Act는 총 430억 유로 규모로 2030년까지 EU의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9%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TSMC 드레스덴 합작 파운드리 등 글로벌 기업의 유럽 투자 유치에 활용. CRMA('유럽판 IRA')는 34종의 핵심원자재·17종의 전략원자재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EU 내 채굴 10%·가공 40%·재활용 15% 이상의 역내 자급 및 단일 제3국 의존도 65% 이하를 명문화

④ 중국: 반도체 빅펀드(大基金) 및 제조 2025

- 반도체 빅펀드는 1기(2014)~3기(2024) 누적 약 136조원 규모로 설계·제조·소재·장비 전 분야를 지원하며, 미국 수출통제에 대응한 자립 생태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 '중국제조 2025'(2015)는 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10대 전략산업에서 2025년까지 세계 선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

⑤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 및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반도체·배터리·중요광물 등 11개 특정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체계를 제도화하였으며,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에 1.2조 엔, 자국 파운드리 '라피더스'에 약 5조 엔을 투자(2027년 2나노 양산 목표). GX추진법(2023)을 통해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탈탄소·에너지 전환 투자를 병행하여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통합적으로 추진

BOX 2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 핵심 산업정책

-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규모 직접 지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세제지원·클러스터 조성·금융지원·기술보호를 축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음

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K-반도체 전략(2021~2022)

- 2021년 K-반도체 전략 발표 후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분야 기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입지 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법제화. 용인·평택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 확보, 전력 인프라 최대 50% 지원, 반도체 인력 10년간 1,500명 추가 배출 등을 추진

②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3~2025)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K칩스법'을 2023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25년 개정으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추가 상향하고 AI·미래형 운송이동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다만 미국·일본의 직접 보조금 방식과 달리 세액공제 중심의 간접 지원에 머물러 초기 투자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업계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③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2024~2047)

- 2024년 1월 발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은 팹리스(판교)·제조거점(화성·용인·이천·평택)·소부장(안성)·연구거점(용인 등)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2,102만㎡)의 생산기지를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해 팹 16기 신설을 목표로 함.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2024년 12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필요 전력(약 15GW) 공급 방안 미확정 등 인프라 확보가 핵심 과제

④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금융지원(2025~2027)

- 세제 중심 간접 지원에서 나아가 직접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산 등 10개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보증·지분투자 등을 맞춤형 지원. 산업기술보호법 강화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허가 요건 엄격화도 병행

⑤ 주요국 대비 한국 지원 정책의 특징과 한계

-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는 세제혜택·클러스터·금융지원 중심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미국 CHIPS Act의 직접 보조금 390억 달러, 일본의 TSMC 유치 보조금 10조 7천억원 등과 비교할 때 지원의 즉각성·규모 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평가. 이에 업계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한국판 IRA에 준하는 생산 세액공제·직접 지원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